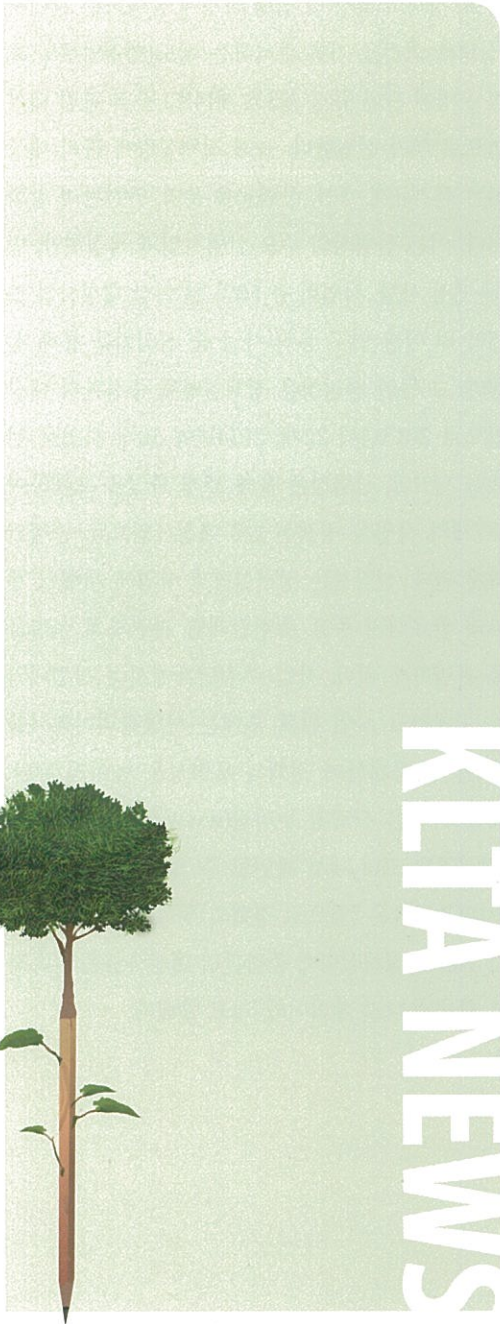




KLTA NEWS + 2015 Summer



산림청, 국민 여론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



- 27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벌채제도 개선 공청회 열어 -
- 오는 10월까지 벌채 관련 규정 마련해 제도개선 추진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오는 10월까지 벌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7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벌채제도 개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그동안 벌채제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이 없고, 벌채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달 23일 현장토론회 때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 전문가,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 주요 내용은 ▲ 모두베기 최대면적을 현행 50ha → 20ha로 축소 ▲ 모두베기 잔존목을 단목 →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

▲ 재해예방을 위한 운재로 설치·활용 ▲ 벌채지 안전 사고 예방법 등이다. 특히, 산림청은 벌채면적을 20ha로 대폭 축소해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 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모두베기 최대면적은 50ha까지 허용되어 있어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 훼손,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벌채 시 남겨두는 나무(잔존목)는 단목존치였으나 군상 또는 수림대 존치하도록 해 벌채지역의 산림생태와 유전자원을 다양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대학원장)의 주제 하에 산림청의 벌채제도 개선안 설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생산과장은 “건전한 생태·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대면적 벌채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지규제 개선, 산림교육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35개 사업 추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했다. 국민적 관

심이 높고 안전 등과 관련된 35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4호)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올해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은 산지규제 개선, 산림교육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는 산림청의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총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또는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했다. 그 동안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2013년에 22개, 2014년에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올해 3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87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중점관리하게 된다.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서 계획부터 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한 번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5만㎡) 폐지로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5월 29일부터 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산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산물 재배 시 면적 제한(5만㎡) 및 일시사용신고 폐지,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허용,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등이다. 그동안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규제 개선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산지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만㎡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전문가 재해위험성 검토, 토석채취장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등도 포함됐다. 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후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개정 절차를 통해 '15. 9월말 하위법령 개정 완료 및 산지관리법 국회 제출 예정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규제개선의 성과와 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 작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자치단체 규제 정비... 조례 전부조사



8월까지 상위법에 근거 없거나 위임범위 벗어난 규제 등 발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그동안 개선한 산림분야 규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 규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할 규제 대상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소극적 또는 과도하게 규정한 경우, 산림분야 규제는 아니지만 산림분야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산지관리법' 등 5개 법률에 12개가 있다.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자치조례 등으로 등

록된 규제는 269개이며, 이 중 가로수 관련이 201건으로 가장 많고, 휴양림 24건, 공유림관리 14건 등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관련단체 등에 규제 발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조례를 전부조사하여 오는 8월까지 과제 발굴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폐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자치단체 공통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치단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며, “자치단체 조례, 행정 지침·관행 등에 포함된 규제를 광범위하게 발굴·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희귀식물 미선나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희귀식물 미선나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대량번식 기술 완성으로
물향기수목원서 볼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희귀식물 미선나무를 대량으로 증식하는 조직배양과 미세한 삼목기술(이하 미세삼목, micro-cutting) 기술을 완료해 일

반인에게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증식된 미선나무 묘목은 300여 그루이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해 물향기수목원(경기도 오산 소재)에 식재돼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이제는 희귀식물 미선나무는 쉽게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미선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로 1속 1종 밖에 없는 희귀·멸종식물로 충남 괴산 등 5곳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최근 경기도 여주시에서 자생하는 미선나무가 발견됨에 따라 이번에 증식된 미선나무를 이용해 자생지 복원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은 국립산림과학원 생명공학연구팀이 2010년부터 미선나무 조직배양 복제 및 미세삼목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최근 대량증식기술을 완성한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과 문흥규 과장은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증식 및 보존은 조직배양 기술이 으뜸이다”라며 “이번 미선나무의 대량 증식 성과가 좋은 사례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 내용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과
문흥규 과장, 김지아 연구사(031-290-1161)

여름방학에 숲에서 교원연수 받으세요



- 산림청, 7~11월, 전국 11곳에서 초·중·고등 교원 대상 산림교육 교원연수 실시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7~11월 여름방학과 가을학기 동안 초·중·고등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 강원 등 전국 11곳에서 산림교육분야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교육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숲에서의 자연놀이, 도시숲·학교숲 탐방, 산림교육 교수법 등 현장중심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는 국가기관(산림교육원, 숲체원)과 민간기관(숲사랑소년단, 생명의숲, 천리포수목원)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들 기관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참여 교사들은 연수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30시간(5일)과 15시간(3일) 2개 과정이 있다. 참가방법은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숲사랑소년단」, 「생명의숲」등에서 진행하는 연수는 접수가 진행 중이며, 「산림교육원」 연수는 이미 마감되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산림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향후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산림교육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 내 산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